

망월묘역 '전두환 비석'에 얽힌 사연 회자

오월 영령 닮기려 재야인사들이 부수고 기자가 가져다나 숨진 영령들 앞에 설 수 있는 산 자의 울분·부끄러움 담겨

21대 대선 정국에서 '전두환 비석'이 진보 성향 유력 대권주자들의 단골 방문 장소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야권의 대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관련 논란으로 호남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 장소의 유래와 의미가 새삼 회자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2일 광주 북구 옛 망월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을 방문해 '전두환 비석'을 밟고 지나갔다.

이 비석은 현재 광주 북구 옛 망월묘역으로 향하는 길바닥에 묻혀 참배객들이 밟고 지나가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비석 안내문에는 '영령들의 원혼을 달래는 마음으로 이 비석을 짓밟아 달라'고 적혀있다.

짚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전씨의 이름이라도 짓밟아야 민주화를 외치다 숨진 영령들 앞에 설 수 있다는 산 자의 울분과 부끄러움이 담겼다.

이 비석의 유래는 이렇다. 지난 1982년 3월 광주를 찾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전남 담양군 고서면 한 마을에서 숙박한 것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비석은 마을 주민들의 주도로 '전두환 각하 내외분 민박 마을'이라는 각인을 새겨 마을 입구 도로변에 세워놓았다.

이후 지난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씨가 정권에서 물러나자 그를 향한 분노를 참지 못했던 한 청년은 깊은 밤을 틈타 해머로 표지석 일부를 깨뜨려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행동으로 비석에 새겨진 전두환의 '전' 글자가 훼손되면서 마을에선 다시 비석을 제작했고, 그 소식은 다시 광주의 민주화운동 재야인사의 귀에까지

들어갈게 됐다.

비석은 이후 재야인사들에 의해 부수 버려졌지만, 뒤늦게 현장을 찾은 당시 전 남일보 사진기자 신중천 씨가 비석을 망월 묘역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망월 묘역엔 5·18 희생자들의 시신이 묻혀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로 부서진 비석을 망월 묘역으로 신고 와 직접 파묻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참배객들의 발아래 놓이게 됐다.

시간이 지나 5·18 희생자들은 국립묘지로 옮겨가고 지금은 이한열 열사 등 민주화운동을 하다 숨진 민주열사들이 영면하고 있다.

옛 망월묘역을 참배하러 온 주요 인사들이 '전두환 비석'을 밟고 지나가는지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묘역 참배를 마치고 나오다 비석의 존재를 듣고 가던 길을 되돌아와 발로 밟고 지나갔다.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이한열 열사를 참배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역시 비석을 밟고 지나갔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이낙연·추미애·심상정 등 진보 성향 정치인들은 대부분 비석 밟기에 주저함이 없었다.

반면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민족민주열사 묘역까지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비석을 밟았거나 밟지 않아 논란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018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이 비석을 밟고 지나갔다.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전 대표는 2018년 8월 비석을 밟지 않고 지나쳤지만 '비석'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 되도록 밟지 않았으



이름 짓밟아 민주 영령 추모 민중 영령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전두환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발로 밟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비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1989년 담양군 한 마을에서 세운 '전두환 비석'을 재야인사들이 폭행으로 부수는 모습. <신중천 씨 제공=연합뉴스>

면 좋겠다"는 해설사의 안내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해를 피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16년 비석을 밟았지만, 이듬해엔 비석을 밟지

않는 동선으로 참배를 했다. '보수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지만 "동선이 문제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태훈기자

'민간공원 특혜' 전 부시장 등 징역형 구형

"공무원 신분 망각 감독권 남용"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최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광주지법 형사1부(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종제(68)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4명의 재판에서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영렬(59)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57)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전 시청 공무원복지과 사무관 양모(5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시장과 윤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

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다.

이 전 국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전달하고 정 전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 사무관 양씨는 제안서 평가 보고서 사본을 광주시시장 보좌관에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검찰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최초 심사 후 광주시가 특정감사를 한 데 대해 "피고인들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한 것"이라며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감독권을 남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특정감사에서 최초 심사 결과표상 중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예상됨은 물론 2020년 6월 공인일몰제 전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돼 적극 행정을 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동수기자

개발계획 입수 부동산 투기 혐의 군의원 구속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담양군의회 의원이 구속됐다.

2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담양군의회 소속 A 군의원을 구속했다.

A 의원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하고 2018년 차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 계획을 부동산 업자에게 누설해 토지를 사들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앞서 2018년 5월부터 20

19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A 의원의 부인은 2018년 10월 자녀 2명의 명의로 보촌지구 내 토지 727㎡를 5천500만원에 사들였다. 2천93㎡ 규모의 농지 1필지를 5명이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보촌리 일대 토지를 2019년 12월 2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A 의원은 십수 년 전부터 개발 공약이 나온 곳이라며 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기자

여성 환자 성추행 물리치료사 2심서 유죄

도수치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물리치료사에게 항소심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 3일 전남의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면서 여성 환자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목 뒤에 손을 넣어 팔베개 한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있으면 해봐도 안 된다"는 말을 했고, B씨의 목 부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올렸다. 또 B씨의 상의를 가슴 아래까지 걷어올린 뒤 배와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만지고 B씨의 손을 억지로 자신의 배에 갖다 대기도 했다.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뒤 허리를 흔들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치료상 필요했더라도 사전 설명이나 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고,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동수기자

광주검찰, 구속영장 기각률 매년 증가

지난해 29.6%...김남국 "적법 요건 충족 꼼꼼히 살펴야"

광주지방검찰청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광주지방검찰청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은 30%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2016년 20.5%, 2017년 17.2%, 2018년 18%, 20

19년 22.3%, 2020년 29.6%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1천807건으로 이중 513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28.4%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22.2%, 2017년 25.1%, 2018년 26.5%, 2019년 29.1%, 2020년 28.4%를 기록하면서 5년 전과 비교해 6% 가량 증가했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지난해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40%를 기록해 절반에 가까운 기각률을 보였다. 이어 제주지방검찰청 36.4%, 춘천지방검찰청 33.3%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구속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적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 발부 여부를 결

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 건수는 지속 감소하는 반면, 기각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것이 나타나는 지적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구속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는 적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피고 신중을 기해 청구해야 한다"면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 스스로 자체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기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http://www.kukje9.co.kr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야외 결혼식
- 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